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 3.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할 것과 우리 국민에 대하여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수도 서울에서 자행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등 최근 점증 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고,

○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온 국민의 뜻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결의문 참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일제가 우리 대한 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 시킨 후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 3월 16일 제정, 의결 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고종 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 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고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각종 언론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와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교활한 행위로 일본국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의도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 전의원은 37만 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규탄하면서 일본 정부 및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 I.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I.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침략 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 I.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하고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대한 영토 사수 의지를 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라.
- I.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37만 시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년 3월 28일

구미시 의회 의원 일동